

# “민주주의 또 짓밟혀”...분노한 시민들 퇴진 목소리 높인다

### 5·18광장 집결 5천여명 참담...광주비상행동 14일 집회 재개 “국힘 내란 동조” 규탄...오월단체 등 “韓-韓 담화 국민 기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파괴되는 순간을 목도한 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광장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규탄했다.

◇탄핵 불성립 다음날에도 5·18광장 집결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99곳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은 8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5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를 개최했다.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제4차 결기대회에는 5천여명이 참석했고, 이날엔 약 2천500명이 함께했다는 게 주최측의 추산이다.

유덕중학교 최모(14)양은 “어제 탄핵 부결 소식을 뉴스로 보고 화가 나 민주광장에 나왔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투표장을 나간 국민의힘은 처벌 받아야 하고, 윤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발언했다.

류봉식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12월7일은 정치가 국민을 배신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가 말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은 그들에게 국정을 위임한 적이 없기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오월 공법 3단체(5·18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모독한 치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단체들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주범들과 협력자들이 사태 해결을 운운하며 국민 앞에 나선 것은 또 다른 반란”이라며 “내란을 방조하고도 국민을 속이며 거짓된 담화를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꾸짖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별도 입장문에서는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검찰 출신 인사 등 특정 세



지난 7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4차 총결기 대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

력에 대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 일은 검찰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발본색원과 함께 관련자 모두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을 두고 “대

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또 한 번 처참히 짓밟혔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힘이 반란군의 충성스런 개가 돼 그 역할을 포기했다”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정치권

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불씨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퇴장 국힘 의원들, 부끄럽지 않나!”

전날 5·18민주광장에서 4시간여 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 무산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도 일제히 울분을 터뜨렸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가결을 막기 위해 투표에 참여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부결시키기 위해 분회의장을 퇴장하는 모습을 중계 화면으로 보고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나”고 비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마감 시간으로 못박은 오후 9시 20분이 다 되도록 ‘추가 투표자’가 국민의힘에서 나오지 않자 시민들은 점점 격앙됐다.

데드라인이 지난 뒤 우 의장이 결국 투표 불성립을 선포하자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자녀와 함께 온 김영섭(43)씨는 “내란죄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됐다니 믿을 수 없다”며 “자녀에게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건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 광주비상행동 등 700여명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제6차 결기대회는 오는 14일 5·18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 비상행동은 조직 정비 등에 나설 계획이며 9일 오후 2시 전일빌딩24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민주원로들과 비상회동을 갖는다. /안재영·주성학 기자

## 姜시장 “실패한 쿠데타 면죄부 준 셈...오래 걸리지 않을 것” 金지사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민주주의 수호 열망 높아”

●尹 탄핵무산' 광주시장·전남지사 반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데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실망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8일 한 대표와 한 총리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 대해 “무효이고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만이 헌정 회복”이라며 “한동훈은 대통령 놀이를 멈추고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후 당

내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가”라며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는 길은 헌법이 정한 절차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 시장은 전날 탄핵소추안 표

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면서 ‘실패한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1995년 검찰은 5·18 내란수괴들에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우리 국민은 오래지 않아 그들을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국민은 강하고 역사는 발전한다”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부결된 데 대해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

음 뿐”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앞 수십 만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의원의 소신 투표가 큰 위안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다음을 위한 희망이 살아 있다.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을 위해 힘내시기 바란다”며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 그 자체가 눈물겹도록 큰 감동”이라고 적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단체장, 지방의원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집회에 참석해 탄핵안 가결에 힘을 실었다. /변은진·양시원 기자

## 광주시의회 “탄핵 투쟁 끝까지 함께할 것”

민주·무소속 의원들 공동성명...“국힘, 국운 결정권 없어”

광주시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및 무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며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역사와 법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으라는 시민의 명령을 저버렸다”며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을 선택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의원들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해 유린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두란 말인가”라며 “국가의 미래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정질서를 조속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함께 계획하는 조기퇴진의 미래가 국헌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우리 국민은 한동훈과 국민의힘에게 단독으로 국운을 결정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변은진 기자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  
우리의 인연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NPS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